

# 서울·대전·부산·경남·광주·전남 ... 전국 곳곳 “선거부정 규탄” 집회



광주시민단체 협의회가 19일 광주YMCA 무진관에서 18대 대통령 선거 1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해결과 공안정국 조성 종단을 촉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지역 종교계와 노동계, 교육계, 환경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남시국회의가 1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 시민사회·종교단체 “민주주의 회복” 호소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19일 서울을 비롯한 광주, 전남, 대전, 부산, 경남 등 전국 도심 곳곳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시민사회·종교계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일어난 관건 선거부정행위 의혹과 그 이후 계속된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강경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 인사 272명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등 31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

부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경찰 폭력은 심화했고 민주주의와 인권은 빈약해졌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규탄 민주수호 광주시국회의”도 이날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으로 집권된 18대 대통령선거 1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인정하지 못하다”라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해결과 공안정국 조성 종단을 촉구했다.

광주시국회의는 “선거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간단히 진실을 덮어버렸고 여당은 야권에 역공세를 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국회의는 “국민의 합법 대통령, 민주 대통령으로 다시 서러면 대선개입과 국정문란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며 “공안정국 조성을 중단하고 대화와 합의의 상생정치를 펼칠 것”을 요구했다.

전남지역 종교계와 노동계, 교육계 등 전남시국회의도 이날 전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부정선거의 실체를 덮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것도 모자라 바른 말을 하는 국민과 종교인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인사로 구성된 민주수호 대전 범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새누리당 대전시당 앞에서 열린 18대 대선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표된 2200만건의 트윗과 사이

버사령부의 2300만건에 달하는 트윗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18대 대선은 부정의 크기와 범위를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로 선거의 정당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남진보연합은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에 모여 국정원이 동원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경남 각계 대표 500명의 민주 선언’을 발표한 뒤 마산역까지 행진하며 철도노조 파업에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부산에서도 종교인과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시국 선언이 잇따랐다.

전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부산지역 불교, 개신교 3대 중산인사로 구성된 민주수호 대전 범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새누리당 대전시당 앞에서 열린 18대 대선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표된 2200만건의 트윗과 사이

## “자치구 폐지 행정구로 통합행정”

한국지방신문협 공동 인터뷰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전국 9개 유력 지방신문사와의 공동인터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지적하고 향후 활동이 ▲광역시 자치구의 빠른 시간 내 폐지 ▲도(道) 기능 재정립 ▲교육 자치의 일반 행정과 통합 등의 방향으로 나갈 것임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행정체제 개편의 주요 내용은.

▲도 기능 재정립 문제와 관련, 지난 5월 공포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도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돼있다. 도 기능 재정립 문제는 장기과제로 설정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다만 사무부문에 있어 국가사무와 나누는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조정하고 있다. 자치사무 중에서 도와 시·군의 업무도 재조정해야 한다.

특별시·광역시외의 자치구·군의 기능에 대해서도 지방행정체제개편위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우리 위원회 인계된 사항인데, 자치구를 폐지하고 행정구로 해서 통합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대도시의 하나의 생활권이다. 한 생활권에 동일한 행정서비스가 지원돼야 하는데 자치구가 되니까 시장이 갖고 있는 동일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어려



워져 오히려 주민 생활에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하고 그 대신 시의원 수를 늘려서 구정협의회 형태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입장.

▲지역주민 여론 중에서 공천 폐지에 대해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들었다. 또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대선공약사항인데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왜 지키지 않는냐는 말까지 듣고 있다.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이 입장을 밝힐 순 없지만 여론과 공약이라는 점만 우선 말씀드리겠다.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것을 정계특위에 통보하고 결정을 의뢰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교육위원 문제는.

▲(광역의원에) 통합하도록 내용이 확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일부 교육계 인사들이 교육위원의 수만큼 광역의원 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치 문제가 일반 행정자치와 통합해서 운영돼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일부 교육계에서 반대하지만 임명직 때는 교육감과 도지사의 관계가, 도지사가 교육위원회의 장을 맡고 교육감을 선출했다. 어떤 형태든 그때보다 교육자치가 일반행정과 아주 별개의 것으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교육자치의 예산은 도나 광역단체가 결정한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의 당위성이 확보됐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단, 방법의 문제다. 단계적으로 연계·협력, 그 다음 통합으로 가는 방안이 나와있다. 교육감을 임명제로 할지, 런닝메이저로 할 것인지 등도 논의할 것이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은 지자체와 의회를 통합하자는 방안이 나왔던데.

▲인구 2만 농촌이나 30만 도시나 체제가 똑같다. 2만에 시장 뽑고 의원 뽑고 하느냐. 의원을 뽑아서 그 사이에서 시장도 뽑고 하는 통합형도(주민이)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軍 “사이버사 정치글 확인...대선개입은 없다”

### 중간수사 발표 ... 야권 강력 반발, 국방장관 사퇴·특검 촉구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일부 요원들이 대선 기간 등에 ‘정치글’을 작성, 트위터 등에 올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들의 행위가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국가정보원과도 연계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낙중(육군소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심리전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 외에 군무원은 4명, 현역 간부는 6명이다.

조사본부는 이들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으며, 군 검찰은 조사본부로부터 수사 자료 등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이 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백 소장은 전했다.

이 단장의 이런 지시는 요원들의 정치글 게시 행위가 사실상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올 수 있어 주목된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

무로 인식,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 6000여 건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정치관련 글은 1만5000여 건으로 분류됐다고 백 소장은 설명했다. 정치관련 글 중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100여 건에 달했다.

사이버사의 ‘댓글 의혹’을 처음 폭로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축소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결과”라고 맹비난하며 국방부 장관의 사퇴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연협뉴스

## 당신의 삶에는 산이 있습니까?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무등산의 품  
그 수려한 산자락에 하늘이 내린 터 하나...

12월 20일, 소중한 분들을 초대합니다

산이 삶이 되는 곳 - 무등산 **이스토리**

**무등산 품에 안긴 숲 속 주거환경**  
무등산 트레킹코스 바로 앞, 무등산 산자락에 위치한 명당중의 명당

**편리하고 우수한 특급 생활인프라**  
병원, 마트, 유원지, 골프연습장 등 두암지구의 풍요로운 생활환경

**사통팔달로 통하는 쾌속생활**  
단지바로앞 제2순환도로로 시내·외 어디든 빠르게 이동하는 입체적인 교통망

**타운하우스 위 노블라이프**  
광주최초 1가구 3대주주, 전세대 남향 배치 등 96세대만을 위한 명품특화생활

223㎡ / 176㎡ (전용면적) 12개동 총 96세대

분양문의 1566-7293

시행 대한주택개발(주) 시공 지구종합건설(주) 분양 주니어스 산업개발